이슈페이퍼 2021-20

KCTULI

ESG는 환경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류승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8.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요약> ····· i

1. 서론 ····· 1

2. ESG란 무엇인가?
   1) ESG의 개념 ····· 3
   2) ESG의 현황과 간략과 역사 ····· 4

3. ESG에 관한 이슈: 무엇이 우려스러운가?
   1) ESG 등급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8
   2) ESG가 그린워싱의 수단이 될 가능성 ····· 11
   3) 녹색 투자를 위한 공적기준의 사례와 한계: EU의 사례 ····· 12
   4) ESG의 효과성 ····· 13
   5) 누구의 윤리이고 위험인가? . ····· 15
   6) 충실한 정보공개가 해결책인가? ····· 16

4. 결론 ····· 18

요약

□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서, 기후 위기 및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 경영 및 투자의 새로운 흐름으로서 부상하고 있음. 종래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는 다르게, ESG는 환경 및 사회적 가치와 이윤 창출 가능성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와 기업 경영의 자발적 변화가 오늘날의 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한편에서는 ESG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ESG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것이 환경과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 ESG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 첫째, 많이 지적되고 있듯이, ESG 등급평가는 다수의 평가업체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관되지 못함. 둘째, 그린워싱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큼.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ESG 등급은 친환경 행위와 그와 반대되는 행위를 엄밀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친환경을 가장한 홍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따라서 ESG는 실제 사회변화로 해석될 수 없음. 셋째, ESG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그러한 위험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함. 투자자들은 이러한 수치로 계량화된 평가를 볼 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계량화되지 못한 더욱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임. 마지막으로, 이러한 ESG를 위한 정보공개의 강화가 요청되고 있지만, 이것은 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에 불과함.

□ 따라서 정보공개 차원에서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녹색 혹은 지속가능성에 관해 지침이 아니라, 확실한 규제를 담보하는 공공적 분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ESG와 같은 자본 주도의 기후 위기 대응책이 아니라, 노동자를 비롯하여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환경, 노동, 사회적 이슈가 논의되고 그에 기반하는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함.

1. 서론

□ ESG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인데, 지구 온난화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변해야 한다는 시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선전되고 있음.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같은 단체의 선언,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ESG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대형 자산관리기업의 행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의 선언 등에서 ESG 이슈는 높은 관심 대상이 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전경련, 경총. 상공회의소 등이 주요 이슈로서 다루고 있으며, 주요 대기업들도 올해 2021년도를 ESG 경영 원년이라고 선언하고 있음. 게다가 시민사회에서도 ESG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환경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근래에 포스코(POSCO)의 버마에 대한 투자를 비롯해 한전 등 국내 자본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시민환경단체들은 국내 기업들의 주식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ESG를 철저하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면서,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음.

□ 이러한 ESG를 강조하는 흐름에 대해 포스코 비판과 같은 사례에서처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 ESG를 제대로 정착시키자는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음. 그러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ESG 자체에 대해 몇 가지 우려스러운 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음.

○ 첫째, ESG와 같은 흐름은 기업의 자발적 변화에 근거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기업의 자발적 변화는 효과적이지 못했음(Green, 2021). 기업의 자발적 변화에 근거한 대표적인 기후 위기 대응책으로서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제와 같

은 탄소 가격제를 들 수 있음. 이것은 탄소에 가격을 매겨서 탄소 다배출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인하는 정책이었음. 그러나 이것은 기후 위기를 막기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맥락에서 ESG와 같은 흐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

○ 둘째, 탄소 다배출 산업이나 그것과 관련된 투자는 더욱 엄격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데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ESG와 같은 흐름은 그러한 감시와 통제의 권한을 그 대상에게 쥐여 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근래 ESG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의 자의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러한 우려와 관련이 있음. 즉 명목상 ESG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그린 워싱(green washing)[1]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음.

□ 본 이슈 페이퍼는 ESG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첫째, ESG에 대한 소개의 차원에서 그것의 개념과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임. 그리고 ESG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도 간략히 소개할 것임. 둘째, 기후 위기 대응 방안으로서, 즉 주로 E(환경)가 관련되어 최근 유행하고 있는 ESG의 내재적 한계 및 문제점을 검토함.

1) 친환경 제품 또는 행동이 아니면서 친환경 제품이나 행동인 것으로 위장해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함. ESG와 관련되어서는 본 글의 3장에서 다룰 것임.

2. ESG란 무엇인가?

1) ESG의 개념

□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임. 종래의 이윤 추구 중심의 기업 경영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내용을 지시하고 있음.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한다면, 환경(E)과 사회(S)는 기업 경영과 무관한 외부 요인이었지만, 이것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risk) 때문에 경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환경과 사회와 달리 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의 대상이라기보다 경영행위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의미함. 즉 지배구조는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ESG를 ES+G로, 즉 기업이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여 운영되도록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일련의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음(박태영 외 2021). 그래서 혹자는 이러한 점에서 지배구조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뽑기도 함.

□ 이렇게 환경과 사회를 기업 경영에 고려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님. 첫째, 기업 경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이해 당사자 또는 이해 관계자들이 등장하게 됨. 둘째, 환경과 사회를 잠재적인 위험(risk)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기업 경영이 단기 이윤이 아니라 장기적 이윤 또는 지속가능성을 좀 더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함. 셋째, 단기 이윤의 추구는 주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알려져 있음. 따라서 환경과 사회의 고려는 주주자본주의 폐해를 시정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함. 그리고 이것이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선전하는 자본주의 (대)전환의 핵심 내용이기도 함.

□ ESG 이전에도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경영에 고려해야 한다는 흐름이 존재했음. 바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음. 기업이 이윤 추구라는 고유한 목적 이외에도 사회나 환경적 가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ESG와 CSR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근래 ESG를 소

개하는 논의에서 CSR과의 차이점이 강조되고 있음.

○ 첫째, CSR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기업이 이윤 획득을 위한 경영과 더불어 환경, 윤리 그리고 지역 사회 등을 포함한 영역에서 가치를 추구할 책임이 있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경영 외적 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에 배치되는, 즉 기업의 영업활동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익을 갉아먹는 행위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채 형식적인 구색 갖추기에 머무르기도 했음. 하지만 그와 정반대로 ESG는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돈을 번다."라고 주장함. 이제 환경이나 사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선이나 박애의 차원이 아니라, 경영의 관점에서 이윤 획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 됨. 따라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ESG에는 CSR에는 없는 당근(인센티브)이 존재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으로서 강조되고 있음.

○ 둘째, CSR은 오로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면, ESG는 철저히 투자자들의 관심사임. 기업에 여러 형태로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오늘날 중차대한 기후 위기와 같은 환경문제나 노사관계의 악화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는 기업 경영과 무관한 문제들이거나 기업이 윤리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 즉 투자 수익에 대한 위험(risk)으로서 여겨짐. 따라서 이러한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는 당연히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마지막으로, 이때의 위험은 종래에는 재무적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비재무적 위험(non-financial risk)이라고 불림.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은 재무적 위험과 더불어 비재무적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정보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

2) ESG의 현황과 간략한 역사

□ 아래 그림은 ESG 금융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음. 기업은 금융 시장을 매개로 투자자로부터 다양한 사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것임. 자금조달 또는 투자 행위에서 ESG가 주된 고려 대상이 될 것임. 따라서 금융 시장에서 ESG에 대한 정보가 가공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금융 생태계에는 3명의 행위자, 즉 ESG에 대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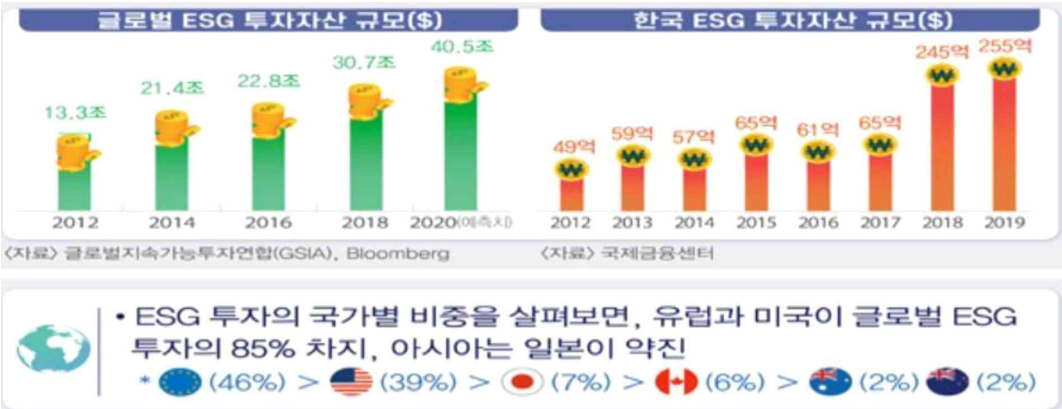
보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자, 더 많은 혹은 ESG에 부합하는 투자를 받기 위한 기업, 그리고 투자 대상과 관련된 정보에 근거하여 전문적으로 ESG 등급을 평가하여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기업(또는 비영리 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림1] ESG 생태계

자료: 금융위원회(2021)

□ ESG 투자는 국외 및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역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비중이 상당하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2] ESG 투자 규모



자료: 매일경제(2021.3.21.)[2]

□ ESG가 오늘날처럼 부상하게 되기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음.[3]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

2) "거세게 부는 ESG 바람…관련 투자 급증하고 국내 기업도 '속도'"(매일경제, 2021.3.21.)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1/03/266646/)

의가 들어서면서 자본 주도의 자유화 및 세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이에 대한 저항으로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비판이나 시애틀 투쟁(1999)과 같은 반세계화 운동의 흐름도 지속되었음.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의 엄청난 착취행태로 인해 소비 거부를 비롯한 반대 투쟁을 들 수 있음. 이렇게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여러 환경 혹은 사회적 이슈도 국제적 대응이 필요했는데, 그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2000년의 UN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임.

□ UN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는 당시 UN 사무총장이었던 코피 아난의 주도하여 민간기업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인권, 노동, 환경 및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에 합의하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업 경영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였음.

○ 이러한 민간기업 주도의 흐름은 국가들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WTO 체제의 실패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음. 즉 국제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 주도성 또는 영향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UN 회원국이 아닌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무적으로 UN의 공식 회의에서의 승인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夫馬, 2020).

□ UN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에서 2004년에 “Who Cares Win”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음. 이 보고서에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가 가장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음. 이 이니셔티브에서 금융투자업 전반에 걸쳐 ESG를 통합하기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음. 이러한 흐름은 2년 뒤인 2006년에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UN PRI(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UN 책임투자 원칙)로 발전하게 되어, 금융투자 분야에서 ESG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4)]

3) 이하 내용은 박태영 외(2021)과 夫馬(2020)의 논의를 참고하였음

4) 여기에서 ESG 투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이 제정되었음. ① 투자 분석 및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들을 포함한다. ② 소유권 정책 및 행사에 있어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를 포함한다. ③ 투자 대상기업에 환경, 사회, 그리고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이슈를 적절하게 드러내는 방안을 강구한다. ④ 투자산업 내 책임투자원칙들의 수용 및 실행을 증진한다. ⑤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협력한다. ⑥ 책임투자원칙의 수행에 관한 각자의 활동과

UN PRI에는 3,038개(2020년 기준)의 기관투자자가 자발적 서약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민연금은 2009년에 가입하였음.

□ ESG와 관련된 자본 주도의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발전하는 가운데. 2008년 금융 위기는 ESG 확대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음.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여, 지속가능성이 기업 경영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음. 월마트의 '지속가능성 360'과 같은 계획이나 유니레버의 친환경 경영이 대표적인 사례임. 또한 금융기관들은 금융 위기로 바닥을 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는데, 바로 ESG는 이러한 위기에 대한 기사회생의 방식으로 등장하였음.

○특히 투자자의 자금을 수탁하여 관리하는 자산운용사의 약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SG를 비롯한 금융투자 부문에서 미국에 소재한 3대 자산운용사(BlackRock, Vanguard Group, State Street Global)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블랙록(BlackRock)이 최근의 ESG와 관련된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블랙록의 투자 규모는 상당한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 100대 상장사 중에서 블랙록이 대주주이거나 2대 혹은 3대 주주인 기업이 57개로 절반을 넘었다고 함.[5] 게다가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블랙록의 경우 EU에서 발표된 지속가능 투자를 위한 분류체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도 블랙록 출신들이 바이든 정부의 고위 경제 관료로 입각하였음.

진전 상황을 각각 보고한다.

5) "한국 100대 기업 중 82곳의 '큰손'… 1경원 굴리는 미국 회사는"(조선일보 2021.08.26.)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8/26/VZNQDHQRVVCHNPSAP7YSKLXJWE/)

3. ESG에 관한 이슈: 무엇이 우려스러운가?

□ ESG는 기업 혹은 투자(자)가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키겠다는 유인책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자발적인 변화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같은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선언은 기존의 기업 행태와 비교하면 매우 긍정적인 것처럼 보임. 그러나 ESG 자체에 내재한 한계점을 생각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우려스러움.

1) ESG 등급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 국내에서도 ESG가 주목할 만한 쟁점이 되면서,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 측면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 특히 부정적 측면에 대해 특히 많이 제기되는 점은 평가와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임. 아래 기사[6]는 그와 관련된 쟁점을 잘 요약해주고 있음.

> 전 세계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생존 전략으로 내세우면서 ESG 평가 기관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ESG는 이제 기업에 대한 핵심 투자 기준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평가의 중요성은 높다. 다만 평가 기관마다 기준도 다르고, 등급 차이도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아 혼란을 낳고 있다. 표준화된 ESG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현재 국내에서 ESG를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는 기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KCGS),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다. 해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톰슨 로이터 등이 꼽힌다. 이들 평가 기관은 대부분 ESG 등급이 필요한 기업에 평가항목 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을 근거로 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공통 기준이 없는 만큼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중략)

6) 이투데이, "너도나도 'ESG'… 기준은 천차만별"(2021. 02. 15) (https://www.etoday.co.kr/news/view/1994387)

□ 위 기사는 ESG 평가의 일관성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포스코의 최근 ESG 등급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아래 두 그림은 해외와 국내 평가 기관의 등급인데, 좌측은 주요 ESG 평가 기관으로 알려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평가이고, 우측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평가임. 우선 서로 다른 평가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평가 결과의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국내의 평가에 대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음. 왜냐하면 이미 언급했듯이 포스코는 버마 군부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임.[7)]

[그림3] 포스코의 ESG 등급

자료: MSCI, 한국기업지배구조평가원

□ 이러한 평가의 비일관성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할 수 있음. 첫째, 평가 등급의 차이는 위 기사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평가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실제로 각 평가 기관마다 평가 기준과 관련된 지침 정도는 공개되어 있지만,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되어 있음. 따라서 평가의 일관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임.

7) "미얀마 군부 '돈줄' 의혹 포스코인터…ESG 최상위 평가 논란"(노컷뉴스, 2021.04.22) (https://www.nocutnews.co.kr/news/5539940)

□ 둘째, 평가 등급이 투자자들에게 하나의 정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할 것임. 그런데 현재처럼 다수의 평가업체가 존재한다면,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쇼핑행위도 발생할 수 있음(Buller, 2020). 가령 기업이나 투자자가 원하는 등급을 얻을 수 있다면,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경영 방식을 바꿀 필요가 없음. 또한 평가업체와 평가 대상의 유착관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음. 물론 이에 대해서는 ESG 관련 정보 이용자가 평가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음. 하지만, 이 경우에는 ESG 정보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평가 기관과 답합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기업 가치를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수 있음(박태영 외 2021). 따라서 ESG 관련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음.

□ ESG 등급평가와 관련해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과정에 관한 것임. 이미 지적했듯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종 결과로서의 등급과 평가 기관에서 공개하는 평가 지침 정도임. 어떤 요인에 얼마만큼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등 구체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평가 기관만이 알고 있는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음(박태영 외 2021). 더 심각한 문제는 ESG 평가를 위한 자료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음. 이 자료는 언론 보도와 같은 공개된 것이거나 평가 대상인 기업이 지속가능 보고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자료임. 평가 기관이 이런 자료를 비롯해 자체적인 조사 작업을 할 수도 있음. 하지만 자료의 신뢰성을 확신하기는 어려움. 기업이 자신에게 민감한 사항에 대해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왜곡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임(Buller, 2020).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ESG 기준 자체 및 그것에 기초한 평가에 있어서 신뢰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결국 표준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표준적인 기준이란 단순한 지침에 그칠 수도 있으며, 보다 공적 성격을 가진 규제일 수도 있음. 이러한 표준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또 현재 주목받고 있는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서 ESG가 그린워싱의 수단이 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임.

2) ESG가 그린워싱의 수단이 될 가능성

□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란 친환경 제품 또는 행동이 아니면서 친환경 제품이나 행동인 것으로 위장해 홍보하는 행위를 의미함.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지닌 ESG 등급평가, 즉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평가되는 ESG 등급은 그린 워싱의 수단이 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도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함.[8)]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ESG와 관련된 펀드 상품의 대부분에서 그린 워싱이 발견됐다는 발표가 있었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몇몇 ESG 펀드 운용사들은 ESG 프레임워크 준수, 대리 투표(proxy voting), 부정 심사 등과 관련된 정책을 어긴 것이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일부 ESG 펀드는 ESG 평가 등급이 낮은 기업에 주로 투자해, 상품 소개에 명시된 ESG 투자 방식과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함. 게다가 “ESG를 단지 홍보 수단으로만 사용된 사례도 적발됐다. 예를 들어 ESG 투자와 관련된 수익률 및 상관관계만 주목해 펀드를 팔았고, 이로 인해 ESG 기반 펀드의 수익률이 부풀려졌다. 일부 펀드는 규정 준수와 거리가 멀었고 ESG 기반 투자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지적도 있었음.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펀드 중 ESG에 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어 그린워싱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평가를 제출하였음.

□ 위의 사례는 과장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ESG 투자라는 명목으로 일어난 일종의 사기 행각이라고도 볼 수 있음. 여기에서도 ESG 등급평가와 관련된 한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ESG가 아니더라도 환경과 사회의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투자 행태가 변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표준적인 평가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ESG 방식, 즉 녹색(green)과 녹색이 아닌 행위를 민간 경제주체의 자발적인 판단에 맡기는 사적 분류체

8) 이하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하였음. “SEC "시중 ESG 펀드 대부분 그린워싱 중" IMPACT ON, 21.04.13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96)

계(private taxonomy)를 넘어서는 공적이며 규제적인 성격이 강화된 기준이 될 필요가 있음. 이미 국내에서도 환경부 등에서 녹색 투자를 위한 지침을 형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이러한 국내의 움직임을 평가하기 위해 해외의 선행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3) 녹색 투자를 위한 공적 기준의 사례와 한계: EU의 사례

□ 녹색 투자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적 기준의 사례로서 EU에서 제정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들 수 있음. EU 분류체계는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2018년) 중 하나로 계획되었으며, 2019년 12월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의해 채택되었음. 주된 내용으로는 6가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 4가지 판단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는 것임. 아래 표는 6가지 목표와 판단조건에 대해 요약하고 있음.

[표1] EU 분류체계 규정의 환경목표 및 판단조건

환경목표	판단조건
①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1)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 2)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3)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 4)기술선별기준에 부합

자료: 임수빈(2020)

□ EU 사례는 공적 분류체계 마련에 있어서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비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음. 우선, 원래 분류체계 마련의 목표는 상당히 강력한 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함.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로비를 통해 규제적 성격이 느슨해져서, 그 범위가 협소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

음.[9] 특히 녹색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좋지만,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다는 점은 분류체계의 규제적 성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임. 즉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데 후자의 측면에 부재하다는 것임.

○ 게다가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분류체계 제정에 있어서 블랙록이 자문으로 참여했고, 싱크탱크, 협회 등의 조직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음(Haar, 2020 ; PetitJean 외, 2021). 블랙록은 현재 ESG 투자 관련해서 가장 큰 이해 관계자인데, ESG 트랜드를 선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탄소 다배출 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기업이 자신을 규제할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에 자문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이란 문제를 발생시킴.

□ 이러한 EU의 사례는 ESG 평가 기준의 단순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공적 분류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임. 녹색 및 그에 반하는 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단순한 가이드가 아닌 실질적인 규제책으로 만들 것인가? 공적 분류체계를 마련할 때 블랙록과 같은 규제 대상의 개입을 얼마나 사회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4) ESG의 효과성: ESG는 환경과 사회를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 ESG의 옹호자들에 따르면, 높은 ESG 등급을 받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환경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ESG 평가 기준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실제적 변화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음. 사회(S)와 관련된 예를 들자면, 피고용인이 작은 기업이라면 노사관계에서 곤란한 일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S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Buller, 2020). 즉 ESG 등급평가는 실제적 내용(변화)을 오로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9) 이하 내용은 Gabor(2021)을 참고

□ 환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임. 위에서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듯이, ESG는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우회하려는 기만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이러한 것은 ESG 투자나 경영 방식을 소개하는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은 소개 글[10]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음.

> 1. 환경에 좋다.
>
> 우리는 빠르게 쇠락하는 자연환경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정보를 매달 접하고 있다.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더 나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분명 중요한 역할을 맡지만 비즈니스 업계도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비즈니스 업계는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정부 및 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고, 조직적 변화를 밀어붙여 전 세계에서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예를 들면 오토데스크가 그런 것처럼 기업이 탄소중립계획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렇듯 훌륭한 목표를 이루려면, 각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해소할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효율화 방안에 투자하거나 재생에너지 및 탄소 상쇄권(carbon offsets)을 구입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드는가? 그러나 미래에 배당금으로 돌아온다.

□ 위의 소개 글에서 나타나듯이, 환경(E)에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효율화 방안에 투자하거나 재생에너지 및 탄소상쇄권을 구입"할 수 있다는 시행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이러한 투자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율화 방안과 재생에너지 투자 및 탄소 상쇄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임.

○ 우선 탄소 상쇄권은 파리 협약 이전에 있었던 기후 협약이었던 교토 의정서에서 결정된 사항임. 교토 의정서는 탄소배출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를 권장하고 그 이외에 탄소 상쇄권을 허용하였음. 탄소 상쇄권이란, 가령 한 기업이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조림 사업 등을 통해 탄소 흡수

10) "ESG란 무엇인가? ESG 투자가 환경과 비즈니스에 좋은 5가지 이유" https://redshift.autodesk.co.kr/what-is-esg/

에 기여한다면, 그만큼을 배출 감축 성과로 인정해주겠다는 제도임. 하지만, 이러한 우회적인 제도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에 기여하지 않으며, 그 사업의 성격상 자연 파괴를 통해 원주민들의 생활 공동체를 파괴하는 부작용만 낳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탄소 상쇄권을 탄소 감축의 직접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효율성 및 재생에너지 투자와 동일시할 수 없음. 물론 평가과정에서 각 행동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으로 차별적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느슨한 분류 기준은 여러 가지 회피 수단을 보장함으로써, 투자의 성격을 녹색으로 바꾸기 어려우며, 투자를 받은 기업의 행태 역시 바꾸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게다가 ESG의 강화를 선전하는 블랙록에서도 투자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 금융기관, 주요 제약회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Buller, 2020). 게다가 블랙록은 화석연료 산업의 가장 큰 투자자로서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별다른 행동 변화가 없음. 따라서 블랙록의 회장인 래리 핑크가 연일 ESG의 강화를 선전하고 있지만, 위에서도 언급한 블랙록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음(PetitJean 외, 2021).

□ 블랙록의 이러한 투자 행태는 ESG를 고려한다는 것이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함. 실제로도 ESG 등급에는 기업규모나 지역에 따른 편의(bias)가 발견된다고 함.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좋은 평가를 받으며, 아시아보다 유럽이 등급이 높은 등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Doyle, 2018).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기업규모의 격차, 경제 규모의 격차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이러한 점에서 ESG라는 흐름은 새로운 자본간 혹은 지역 간 승자 독식의 구도를 형성할 수도 있음.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임.

5) 누구의 윤리이고 위험(risk)인가?

□ ESG는 종래에는 계량화하지 못했던 여러 '환경·사회적 가치'를 계산 가능한 위험(risk)으

로 평가함. 그리고 이를 위한 기준 마련과 평가의 수행은 자발성이란 미명하에 매우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물론 기후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닥쳐올 여러 위험에 대해 질적인 평가와 더불어 양적 평가도 필요할 것임. 그러나 ESG에 대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위험은 누구의 위험이며. 그 위험 및 그것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임(Parfitt, 2020). 즉 위험에 직면한 당사자와 위험을 평가하는 주체가 구분되어 있으며, 이것은 위험의 내용과 정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움.

□ 가령 ESG의 세계에서는 실제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위험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 지금도 기후 위기로 인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역과 그 주민들이 존재하지만, 위험의 정도와 판단은 블랙록과 같은 선진국의 금융자본이 주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도는 미래의 위험에 대해 완벽한 판단을 보장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음. 투자자들은 수치로 계량화된 평가를 볼 뿐, 그 이면에 존재하는 계량화되지 못한 더욱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는 무관심함.

□ 게다가 오늘날의 환경·사회문제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착해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비판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음. 그런데 ESG에 담겨 있는 환경 및 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까지 노동조합,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고유하게 고민하고 싸워왔던 이슈들이었음. 결국 오늘날 ESG의 유행은 우리 사회가 기존에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던 문제들이 기업과 투자자들의 잣대로 평가받게 되는, 다시 말해 오늘날의 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상이 그러한 위험을 판단하고 평가하겠다는 주객전도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6) 충실한 정보공개가 해결책인가?

□ ESG의 한계로 지적한 평가의 자의성과 일관성 문제는 ESG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제기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더욱 솔직하고 철저한 정보공개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정보공개와 관련된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라 불리는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를 들 수 있음.[11] 이것은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직면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위험 관리 체계와 전략에 반영한 뒤,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수치화해 외부 공개를 권고하고 있음. 블랙록 역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TCFD의 권고를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음.

○ 정보공개의 기본적 논리는, ESG와 관련된 완전한 정보가 보장된다면,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행동에 따라 환경 및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가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논리는 아니고, 금융 시장이 자원 배분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기본 논리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임. 이러한 해법은 2008년 금융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논리로도 이미 제기되었음(Christopers, 2017).

□ 하지만 정보공개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움. 가령 정보공개의 범위도 문제이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투자에 영향을 미쳐 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임. 이론적인 차원에서 정보공개는 위험(risk), 즉 계산(예측) 가능한 위험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소위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음(Christopers, 2017). 따라서 투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공적 분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Gabor, 2020; Buller, 2020).

---

11)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위임한 금융안정위원회가 자발적이고 일관된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2017년에 구성한 조직으로서 블룸버그의 사장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의장으로 있음.

□ 첫째, EU의 사례를 교훈 삼아,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배제하고 장기적인 전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녹색 혹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공공적 분류체계 마련이 필요함. 둘째, 녹색(green)과 더불어 그에 반하는 활동을 규정한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녹색 혹은 지속가능성에 반하는 활동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어야 함. 셋째, 사회경제적 전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부문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함.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실제로 녹색 사업에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을 했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음. 넷째, 물론 이러한 통제와 변화 방안의 전제로서 사회경제적 전환의 방향과 그 방법의 모색 역시 필요할 것임.

4. 결론

□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는 다르게, 환경 및 사회적 가치와 이윤 창출 가능성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금융투자와 기업 경영의 자발적 변화가 오늘날의 위기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이런 변화에 호응하면서 한편에서는 제대로 된 ESG의 정착을 주장하며 그것이 가진 여러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ESG가 부상함에 따라,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음. 가령 정보공개 강화와 같은 것이 시민환경단체들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평가 기준의 상이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마련되고 있기도 함.

□ 하지만 본 이슈페이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ESG의 한계를 짚어보고, 이것이 환경과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음. ESG 등급의 평가는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환경과 사회의 문제들을 경영상의 위험으로 파악하지만, 그러한 위험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함. 충분한 정보공개가 ESG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신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불과함. 따라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투자자와 기업에 기후 위기의 책임을 보다 강하게 묻는 방식의 개입이 요구될 필요가 있음. 가령 투자의 내용과 방향성을 규제하기 위한 공적 분류체

계 마련은 그러한 개입의 한 가지 사례임.

□ 본 이슈페이퍼는 주로 E(환경)를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이나 지역 사회와 관련된 S(사회)도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두드러지고 있음. 오히려 E와 S의 상호 연관 관계가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하지만, E와 S 혹은 그것이 포괄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는 과거에도 노동자들 및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직면해왔던 것임. 따라서 자본이 주도하는 ESG 논리를 넘어서 이들이 주체가 되어 기후 위기 대응 및 사회경제적 전환을 주도하는 논리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금융위원회(2021) 「ESG 국제동향 및 국내 시사점」, 2021. 2

박태영, 윤건용(2021) 『ESG의 구조』, 문우사

임수빈(2020) 「EU 분류체계(Taxonomy) 현황과 시사점」, Weekly KDB Report(2020. 8. 18)

夫馬賢治(2020) 『ESG思考』, 講談社

Buller, A.(2020) 「Doing Well by Doing Good'? Examining the rise of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ESG) Investing」(common-wealth.co.uk)

Christophers, B.(2017)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Instability: Risk Disclosure and the Problematics of Neoliberal Governance」,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07:5

Dafermos, Y., Gabor, D. & Michell, J.(2021), 「The Wall Street Consensus in pandemic times: what does it mean for climate-aligned development?」, Canadian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42:1-2

Doyle, T. M. (2018) 「Ratings That Don't Rate: The Subjective World of ESG Ratings Agencies」, ACCF

Gabor, D.(2020) 「Greening the European Financial System: Three ideas for a progressive Sustainable Finance agenda」, FEPS Policy Brief June 2020

Green, J. F.(2021), 「Does carbon pricing reduce emissions? A review of ex-post analyses」, Environmental Research Letter. 16

Haar, K.(2020) 「The BlackRock Model」, Change Finance and Corporate Europe Observatory

Parfitt, C. (2020) 「ESG Integration Treats Ethics as Risk, but Whose Risk? Responsible Investment in the Context of Precarity and

Risk-Shifting」, Critical Sociology Volume 46 Issue 4-5

PetitJean, O. and Cuveiler, L. (2021) 「HIGHJACKED:Exposing BlackRock's Grip on the EU's Climate Finance Plans」, RECLAIMFINANCE

*인터넷 검색 자료

"거세게 부는 ESG 바람…관련 투자 급증하고 국내 기업도 '속도'"(매일경제, 2021.3.21.)

"한국 100대 기업 중 82곳의 '큰손'… 1경원 굴리는 미국 회사는"(조선일보 2021.08.26.)

"너도나도 'ESG'… 기준은 천차만별"(이투데이, 2021. 02. 15)

"미얀마 군부 '돈줄' 의혹 포스코인터…ESG 최상위 평가 논란"(노컷뉴스, 2021.04.22.)

"ESG란 무엇인가? ESG 투자가 환경과 비즈니스에 좋은 5가지 이유"
(https://redshift.autodesk.co.kr/what-is-esg/)